

# 공주민제(DCA)에 대한 레드팀/마르크스주의적 비판

## 공주민제(DCA) 개요

공주민제(Distributed Citizen Assets; DCA)는 이상연이 제안한 **노동 소멸 시대의 사회-경제적 대안**으로, 노동이 더 이상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DCA 선언은 **기술 발전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유효수요가 붕괴되는 위험**을 진단하고, 시장의 소비자·주권자로 남기 위해 시민들을 기업·공공자산·데이터·AI 수익에 **세금과 복지뿐 아니라 “지분(권리)”로 연결하는 체제**를 제안한다 ①.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다:

- **기회자본(opportunity capital)**: 기본지분, 금융·정보·교육·시장·의결 접근권을 묶은 권리 묶음 ②.
- **Zero Capital Access**: 시민이 자본지분이나 배당·의결권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적 상태 ③.
- **사회화의 재정의**: 국유화나 몰수가 아니라 국민유화—모든 시민에게 분산된 지분권을 부여해 누구도 자본 접근권 0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 ④.
- **블록체인 기반 자율거버넌스(DAO)**: 분산 소유와 분산 의결, 책임을 결합하는 제도 설계. 위임 상한, 시간 지연, 이중 승인 등의 **포획 방지 규칙**을 헌정 수준에서 설계한다 ⑤.

DCA가 강조하는 실천적 장치들은 세 가지 “분산”이다:

1. **분산 소유** - 모든 시민에게 최소 지분을 보장하는 국민지분계정(N-DSA)과 사회 잉여의 지분배당을 통해 “무지분 상태”를 제거한다.
2. **분산 의결** - 자산운용사와 소수 엘리트에게 결정권이 재집중되지 않도록, **상한·만료·지연·다중승인·로그** 등을 적용한 ‘분산 의결 프로토콜’(DDP)을 헌정 원리로 삼는다.
3. **분산 책임** - 공개감사, 이해상충 공시, 집단소송, 징벌적 제재 등을 통해 지배블록이 구조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고정한 다 ⑥.

DCA는 노동-자본 구도가 해체되는 시대에 계급정치의 새로운 분기선이 “**노동자 vs 자본가**”에서 “**무지분(자본 접근권 0) vs 유지분**”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따라서 임금 인상·일자리 창출 같은 전통적 요구를 “지분 접근권 0의 제거”와 “생산수익 접근권을 권리로 고정”하는 요구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DCA는 국가의 전복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국가가 수행하던 대리 기능을 **투명한 프로토콜과 감사 인프라**를 통해 흡수하여 “필요 없어지는 방식”으로 국가 기능을 해체한다고 주장한다 ⑦.

## 레드팀/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1. 노동 소멸 가설에 대한 문제 제기

DCA는 AI와 자동화가 임노동을 구조적으로 대체하여 **자본-노동 관계 자체의 종언**을 전제한다 ⑧.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 **기술이 노동을 “대체”한다는 결정론적 전제**: 자동화는 특정 직무를 대체할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플랫폼 노동, 감정노동, 데이터 생산 등)을 낳는다.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은 현대 자본주의가 노동의 형태를 변형할 뿐 노동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DCA가 노동 종언을 당연시하는 것은 계급투쟁과 노동가치 생산을 간과하는 기술결정론적 분석이다.
- **노동의 사회적 의미 축소**: DCA는 임노동을 소비·재생산의 유일한 매개로 본다. 그러나 역사적 물질주의적 관점에서는 노동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인간의 사회적 존재 방식**이며, 노동을 통해 공동체와 자아가 형성된다. 노동을 완전히 지분·배당으로 대체하려는 발상은 인간 해방의 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

## 2. 자본 소유의 분산과 ‘계급’ 문제

DCA는 자본 소유를 국유화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분산**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정의한다<sup>4</sup>. 이는 기존 주주 자본주의를 확대하여 “모두가 주주가 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소유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회피한다.

- **사적 소유의 지속**: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해 잉여가치 수탈을 폐지하는 데 있다. DCA는 기업 지분·데이터·AI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지만, 생산수단은 여전히 **사적 기업과 플랫폼**이 운영한다. 지분 분산이 실질적 통제권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소유는 형식적일 뿐이며, 지대와 결정권은 여전히 초유지분층에 집중될 위험이 있다. DCA도 “지분과 통제권의 자동 결합 해체”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는 기술·재정적 능력과 정보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대중이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계급 대립의 희석**: DCA는 계급 대립을 ‘무지분 vs 유지분’의 접근권 문제로 치환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을 단순한 소유 수준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관계와 잉여가치의 전유 구조**로 정의한다. 노동의 종말을 가정하고 계급정치의 초점을 임금에서 지분 배분으로 이동하는 것은 **착취 구조**를 은폐할 위험이 있다. 노동의 가치가 축소되더라도, 플랫폼·알고리즘·데이터를 관리하는 소수가 초과이익과 규칙을 통제하는 한 계급 착취는 다른 형태로 지속된다.

## 3. 금융화와 자산시장 의존

DCA는 시민에게 배당되는 지분을 **데이터·AI 수익·사회적 자산의 배당**으로 설계한다. 이는 제도적 복지 대신 **배당소득**을 보편화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금융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 **시장 변동성과 시민 생활**: 주식·데이터 권리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시장 수익률과 기업 성과**에 의존한다. 주식시장 변동이 시민의 생계를 직접 좌우하는 구조는 불안정성을 확대한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산 가격 폭락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DCA는 이러한 위기에 취약하다.
- **자본의 재정적 지배 강화**: 시민 지분 계좌(N-DSA)가 금융 시장에 연결될 경우, 대형 자산운용사와 플랫폼이 여전히 **투자 의사결정과 데이터 권리**를 장악하게 된다. DCA는 자본을 세금·복지에서 주식·배당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화된 사회적 생존**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 4. 기술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DCA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거버넌스 및 **프로토콜과 감사 로그**를 통해 신뢰를 설계한다고 한다<sup>5</sup>. 이는 권력 포획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제시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수반한다:

- **디지털 접근 격차**: 블록체인 지갑, 분산 ID, DAO 참여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접근,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교육 접근권을 묶어 제공한다고 하지만<sup>2</sup>, 현실적으로 **노년층·저소득층·비문해층**이 이런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렵다. 디지털 소외가 곧 **지분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
- **감시와 데이터 통제**: DCA는 국가 대신 프로토콜이 권리 장부(N-DSA)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모든 시민의 지분·배당·투표 기록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구조는 **감시 자본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기업과 국가가 데이터를 통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고 하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주체가 새로운 지대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669543809458095 + L2960-L2997】.

## 5. 국가 흡수론과 정치 전략의 문제

DCA는 국가의 전복이 아니라 “국가 기능의 흡수”를 주장한다. 국가가 수행하던 대리 기능을 사회가 프로토콜과 감사 레이어로 흡수하여 **폭력적 봉괴가 아닌 ‘필요 없어지는 방식’**으로 국가를 대체한다고 한다<sup>7</sup>. 이는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정치적 투쟁을 간과한다.

- **국가의 중립성 가정**: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특정 계급(자본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억압 apparatus로 본다. 국가 기능을 흡수하려면 **계급 권력에 대한 투쟁**과 국가 기구의 해체가 필요하다. DCA는 ‘프로토콜로 대체’하면 국가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서술하지만, **법과 강제력을 가진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해에 따라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 **계약 정치의 한계:** DCA는 사회 계약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 계약은 계급 간 타협을 전제로 하며, 자본-노동 관계가 해체되지 않는 한, **지배계급은 항상 계약을 무력화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노동계급 조직(노동조합, 정당)과 집단적 투쟁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변혁하는 전략을 중시한다. DCA는 집단적 노동운동을 “노동 중심의 낡은 언어”로 치부하며, 계급투쟁을 권리·지분 설계로 대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sup>9</sup>.

## 6. 국제적·식민주의적 맥락 부재

DCA는 주로 한 국가(또는 블록체인 커먼즈) 내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가치의 상당 부분은 **세계 남반부 노동자와 자연 자원의 착취**를 통해 창출된다. 시민에게 분배되는 지분과 배당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한 착취에 기반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국제주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분 배당**은 제국주의적 수익 배분 모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종합 평가

DCA는 **노동 소멸과 유효수요 붕괴**라는 미래 시나리오에 대응하려는 참신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지분 접근권을 헌법적 권리로 고정**하려는 구상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플랫폼 독점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또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위임 상한·시간 지연·이중 승인**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 점은 민주적 거버넌스 설계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DCA의 설계에는 여러 **핵심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노동의 소멸을 과장한 기술결정론, 사적 소유와 계급 착취 구조의 지속, 금융화 의존, 디지털 격차와 감시 문제, 국가와 권력에 대한 순진한 이해, 그리고 국제적 착취 관계를 도외시하는 점 등이다. DCA는 **마르크스주의의 “반동화”**를 비판하며 스스로를 새로운 전환기 해석의 분기점으로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적 소유와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보다는 자본주의를 변형·연장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또는 주민주주의적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과 생산수단의 사회적 성격을 재구성하고, **생산과 소비, 결정권을 통합적으로 민주화하는 실질적 사회주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DCA의 제안은 새로운 형태의 분배 메커니즘일 수는 있으나, **마르크스주의적 해방과 계급 철폐**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

---

<sup>1</sup> <sup>2</sup> <sup>3</sup> <sup>4</sup> <sup>5</sup> <sup>7</sup> 공주민제(DCA) 선언 — 노동 소멸의 시대, 분산 소유·분산 의결·분산 책임

<https://leesangyeon69-maker.github.io/DCA/>

<sup>6</sup> <sup>8</sup> <sup>9</sup> marxism\_renewal\_20251214.pdf

[https://leesangyeon69-maker.github.io/DCA/pdfs/marxism\\_renewal\\_20251214.pdf](https://leesangyeon69-maker.github.io/DCA/pdfs/marxism_renewal_20251214.pdf)